

지역경제와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모 성 은¹⁾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1. 서 론

우리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위기의 여파가 우리의 국가경제는 물론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경기안정을 국정의 일의적 과제로 상정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경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것은 지방재정정책이 지역경제부문에 있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의 지침에 의해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을 곤혹해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왜 필요한 지 그 도입과정과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솔선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한다. 더욱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지방 경기회복에 보다 큰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시책으로서 ‘아름다운 소비운동’을 제시하고자 한다.²⁾

1) 경제학박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교수, 한국지역경제학회 부회장.

2) 모성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5집, 2005년6월, pp.3~21.

2.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와의 관계

가.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며 또 정책목적에 합치하도록 지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³⁾

지방재정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 일반적인 재정목표 외에도,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는 편익제공 등 지방재정의 고유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지방재정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세출·세입활동 뿐 아니라 민간시장경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재의 공급기능이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공원·하수도라고 하는 지방공공 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둘째, 민간재의 조정기능이다. 현실적으로 민간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최적량의 확보가 곤란하다. 어떤 경우에는 생산 과정에서 공해 등의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생산과 소비를 억제시켜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때 그 억제 또는 장려 수단으로서 조세부과나 보조금의 정책수단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재정정책이 된다.

셋째, 소득과 부의 재분배기능이다. 부의 재분배는 사회체제의 안정을 꾀하고 보다 살기 좋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 재분배 정책은 도저히 사람들의 논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해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은 어떻게든지 공권력을 가진 정부의 손에 의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재분배 정책은 누진과세와 사회복지적 재정지출을 통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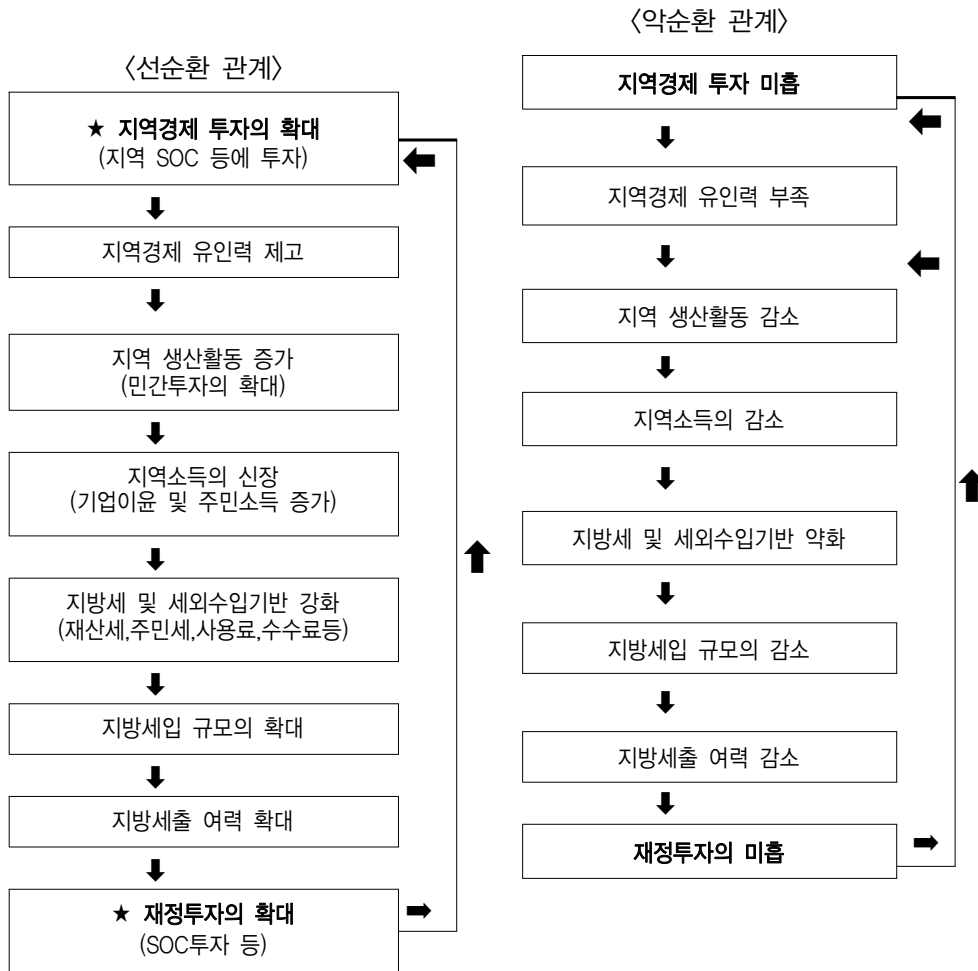
넷째, 경기변동을 조정하여 경제안정을 유지시키는 일이다.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경기가 침체되거나 물가상승이 심각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유효수요의 변동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안정화시킬 능력이 민간경제에는 없다. 그러나 지방재정 활동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다.

다섯째,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이다.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하여 민간투자의 촉진, 산업활동에 관련된 공공시설 정비 등의 시책이 재정활동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즉, 성장의 중요한 전략산업부문에의 재정지출 확대는 해당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수반하고 이는 곧 지역산업의 성장을 가져와 지역경제 전반의 발전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김철·신해룡 공저, 『지방재정학』, 세명서관, 1990. p. 27.

나.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와의 연관성

(그림)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순환관계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에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연계고리가 형성된다.⁴⁾ 전형적인 예로,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의 형성은 해당 지역의 유인력을 제고하여 투자의 지역유입과 생산활동을 증가시킨다. 이는 지방세수기반을 강화하여 세입이 확대되고 지방재정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또다시 지역경제 기반에 확대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성장하는 선순환의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재정투자의 축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기업과 개인의 체

4) 모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 전략”,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1년9월호, pp.93~98.

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킨다. 세수감소는 다시 세출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투자사업의 축소·연기, 민간보조금 축소 등을 초래하면서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금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이때 만일 내부의 자구노력과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다면, 악순환은 계속된다.⁵⁾

즉, 지방재정은 지역성장을 유도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치료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은 지방세수 기반을 제고시켜 지방세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세출규모 확대 등 재정능력과 기반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역경제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쌍방향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⁶⁾

3. 내수침체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가. 최근의 경기상황과 내수침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실질소득이 통계사상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소득 감소는 실질소비 감소로 이어져 실질소비감소율 역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연간 및 4분기 가계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한 것이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경제위기 여파로 2008년 1분기 1.2% 이어서 2분기와 3분기 각각 0.3%, 0.0%를 기록했다. 4분기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8년 연간소득 역시 실질소득 기준으로 0.2% 감소한 것이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역시 급감했다. 2008년 4분기 소비지출은 224만9000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실질소비비는 3.0%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나.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고,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부동산 경기의 안정과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이라는 수단을 단행했다.

5) 임성일, “지방재정의 압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국토연구원, 2001년 3월호, p. 15.

6) 김종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자치연구」, 제4권 제2호(통권7호), 한국지방자치학회, 1992. 2., pp. 183~185.

7) 사실상 실질소득통계를 작성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2003년이므로 보다 자세히 말하면 2003년이후로 해야 할 것이다.

경기부양이란, 침체해 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경제가 발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서,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고 내수 소비가 진척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경기 부양이다.

경기부양의 일반적인 방법은, 시장에 현금이 돌게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시장에 현금이 돌게 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춘다. 또 국공채를 발행하고, 국가가 주도한 여러가지 공사를 시작해 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임금이 지급되어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하는 것이다.

다. 지방예산의 조기집행과 성과예측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지방경제에서도 이루어졌다. 그중 하나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다.

작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시도기획관 회의를 통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지침을 시달렸다. 재정조기 집행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재난 상황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상반기 내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을 집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90%이상을 조기발주’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방 기업으로 하여금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60%의 조기집행’은 실제로 자금이 지방에 뿌려지도록 지방재정 총액규모대비 60%에 해당하는 114조원의 구체적인 집행규모를 설정하고 상반기중에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상반기중 집행되는 114조의 규모는 전년도대비 27%가 증액 집행되는 효과를 보인다.

더욱이,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추진되도록 했다. 2009년도 상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은 모두 긴급입찰 대상사업으로 간주해 소액수익의 경우 공고기간을 3일, 긴급입찰인 경우 현행 최단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인 매칭펀드사업도 지방예산이 확보되지 않아도 국비 보조 예산 범위에서 먼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어 지방예산 확보 시 2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5월경 또는 그 이후에 1차 추경이 진행되던 것이 3월초에 추경이 진행될 예정이다.

SOC사업 등 주요투자사업 예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에 모두 배정되어 동절기를 지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조기재정집행의 효과가 근로자와 저소득층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급자에게 대금이 직접 지불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직불합의를 하도록 하고, 직불에 대해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공사금에 대한 선금 지급 하한율도 종전 지급율에서 10%를 인상하도록 해 공사업체들의 자금 확보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민간에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경비도 1/4분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현재 행안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 114조원의 상반기 조기집행은 재정적자 없이 약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유사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론적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0.45%p 정도 끌어 올리고 15만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⁸⁾

4. 정책의 보완……‘아름다운 소비운동’의 병행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위기상황과 이에 대처한 지방예산 조기집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방예산의 조기집행만으로 얼마나 지방의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니 단숨에 회복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기침체의 속도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방의 소비(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내기 위하여 소비의 침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는지 그리고 소비의 중요성과 함께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소비침체의 원인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소비(내수)가 침체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최근 소비 침체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의 침체원인으로 첫째, 소비여력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소비여력의 감소는 실세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말한다. 이는 실업률 증가 및 소득의 감소는 물론, 국민의 세 부담 증가 내지 가계부채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심리의 위축요인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8)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정부지출 5조원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5조원규모의 추정은 총114조원 중 27%에 해당하는 30조원을 6개월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또 정부예산은 정부부문별 평균지출비중에 따라 정부소비지출 80%, 정부고정자본형성 20%로 지출된다고 가정하였다. 정부소비지출의 경우, 정부에 의한 직접소비지출 이외에 민간소비지출을 유발하는 민간이전 부분이 있고, 정부고정자본형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OC 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매입비용은 민간소비지출을 유발한다. 다만 이들 부문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과 계산의 편의를 고려해 모든 예산이 정부 소비지출과 정부고정자본형성으로 지출된다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5조원의 재정지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4조4,215억원에 달하며, 명목GDP를 0.75%포인트 가량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경제성장률(실질GDP기준)로 바꾸면서 약 0.45%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0.30%포인트 정도는 물가상승(GDP디플레이터기준)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의 계산방식은 과거의 산업연관표 자료와 기준에 근거하여 필자가 계산한 사후적인 수치이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기준의 자료로 재계산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수 있는데 우선, 고용불안을 들 수 있다. 조기퇴직, 실업률 증가와 취업구조 불안 등으로 인해 소비를 억제하는 등 고용불안이 근로자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이 자산소득 계층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소비의 유용성과 ‘아름다운 소비운동’의 전개

케인즈에 의하면, 일국의 경제규모는 총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총수요는 다시 소비와 저축과 정부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

만약 경기가 불안해질 경우, 국민들은 자연히 경제활동에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 이렇게 국민들 전체가 소비를 줄이게 되면, 기업들이 아무리 쉽게 자금을 동원하여 물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팔리지 않아 생산활동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기업사정은 어려워져 직원을 줄이고, 해고된 직원은 소득이 없어 더욱 소비를 줄이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즉, 소비의 부진은 기업의 생산감축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생산감축은 실업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소비의 부진이라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은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아름다운 소비’가 필요한 것이다.

아름다운 소비란⁹⁾ 자기 자신은 물론 국가나 사회나 이웃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된 구매를 실행하며, 현재 이상의 소비수준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국가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제품을 구매하여 기부하는 등의 자선구매는 ‘아름다운 소비’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다.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그러면 소비(내수)진작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시민의 소비여력 증대가 필요하다. 소비여력은 국민소득 증대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하지만 국민의 조세부담과 가계부채의 경감을 통해서도 이를 수 있다.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단행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르는 성공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세부담과 부채부담을 감축시키는 정부노력이 추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9) 강석후, “아름다운 소비,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운동의 한 방안”, 한양비즈니스리뷰 제13권, 2001.12, pp.71~81.

둘째, 소비진작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소비는 사회저변에 깔린 분위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소비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да할 것이다.

먼저, 소비진작 분위기를 주도할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민층보다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에 대하여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중산층 또는 자본가 계층에서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서민층의 소비도 간과할 내용은 아니다. 서민층도 일정하게 계획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자본계층,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주로 소비하는 외식, 관광여행, 교육비 등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들이 좀 더 용이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고가품과 사치재 등에 대한 소비를 배척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과거부터 형성되어온 국민정서는 ‘절약이 미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여건과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소비가 미덕’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급 쇼핑지역 등에 명품점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해외소비의 누수현상을 국내 소비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소비진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통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를 통해 소비진작을 홍보하고, 시민단체등과 합동으로 소비진작을 위한 세미나 내지 토론회를 개최하던가, 보다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맺는말

지혜로운 경제주체라면 돈을 얼마나 더 효율 높은 곳에 쓸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지자체의 단순한 세입세출의 활동으로만 간주되어왔다. 그래서 지침이나 규정에 적힌 대로 틀림없이 지출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재정 운용의 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지방스스로가 재정적 권한을 갖고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지방재정 수단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해야하는 것이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단순히 중앙의 지침에 의해 추진해야하는 수동적 자세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경기부양기능에 대한 인식을 공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 스스로가 지방의 내수경기와 소비진작을 위해 술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물론,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한 보완시책으로서 ‘아름다운 소비운동’을 지자체 스스로가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성과가 아무리 크게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소비욕구가 얼어붙어 시너지 효과가 단절될 경우 지방재정 시책은 한낱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단위에서도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지역경기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이 조기에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을 조기 확정해 주어야 한다. 더욱이 교부 및 확정내시가 지연되고 있는 매칭펀드 및 총액계상사업, 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는 수시배정사업을 조기 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방에서 소비진작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득·소비과세 체계를 개선하고 또 지자체의 세출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채발행, 민자유치제도 등에 있어서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투융자제도를 개선하여 지역투자효과가 제대로 지역경제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정투자의 성장과실이 지역경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의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석후, “아름다운 소비,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운동의 한 방안”, 한양비즈니스리뷰 제13권, 2001.12.
- 김종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자치연구」, 제4권 제2호(통권7호), 한국지방자치학회, 1992. 2.
- 김철·신해룡, 『지방재정학』, 세명서관, 1990.
- 김현식, “가계대출 확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석사논문, 2004.
- 모성은, “내수·소비촉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내수·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수원시·한국지역경제학회, 2005.
- , 「지역경제정책론」, 박영사, 2001.
- 박연숙, “주가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대한 실증분석 : 환율과 사치재 소비품목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04.
- 임성일, “지방재정의 압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국토연구원, 2001년 3월호.
- 시정개발연구원, 「시민수요와 소비패턴」,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1994.
- Schwartz, Amy Ellen 「City taxes, city spending : essays in honor of Dick Netzer」, Edward Elgar Pub, 2004.

Campbell, Rebecca 「On government structure and spending : the effect of management form and separation of power」, Oliver & Boyd, 2002.

Barr, Stewart Gilg, Andrew W Ford, Nichol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nalysing attitudes towards household-waste management」, Pion Ltd, 2001.

Tucker, Peter 「Attitudes and Behavioral Change in Household Waste Management Behaviors」, Carfax 2003.

